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황 미 영(부산가톨릭대)

1. 문제의 제기

최근 서구의 빈곤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과거의 현금지원 방식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노동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후기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의미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Coffield, 2001). 한국에서도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라 노동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제도화됨으로써, 서구의 공적 부조제도 개혁과 같은 방향에서 빈곤여성의 노동능력 계발과 경제적 자립이 모색되고 있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보다 양호한 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부 프로그램과 그 중 근로능력이 보다 취약한 비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002년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공공청소, 음식물 자원화 등 이른바 5대 표준화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프로그램과 기타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형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조건으로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2002)

한국의 빈곤여성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중 다수가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빈곤여성에 대한 “요보호계층”적 접근과 “빈곤의 여성화”라는 정치사회

적 접근을 기초로 한 평가와 모형개발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¹⁾ 이들 연구 중 한국여성연구소(2001)는 자활지원사업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시작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성주류화 관점의 유지와 관철을 주요하게 제안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자활지원정책이 자활지원자 선정과정에서 조건부 면제자 또는 유예자 선정기준과 근로능력 평가기준이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체계를 유지시키며, 여성을 자활사업의 참여기회,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자활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여성=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가사전담자, 남성=생계부양자로서 사회활동전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과 이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주의에 근거해 자활사업에 접근하면서 특히 빈곤여성의 사회적 조건과 경제적 자활의 성공을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논의로는 이숙진 외(200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실업과 취업을 단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며, 결국 제도적 보호로부터 소외됨과 동시에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빈곤여성에 대한 자활사업은 전략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소득 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여성범주를 다양화시켜 차별화된 자활사업의 유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여성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권자의 60% 가까이 되는 현실 속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사회적, 노동시장적 조건을 해명하는 선구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모형개발을 위한 '관점'이나 '시론'의 수준에 그치는 한계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시행된 지 1년 반에 가까워 오는 자활 프로그램의 실태를 바탕으로 여성 자활의 현실적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가부장적 종속성으로부터 여성의 빈곤탈피를 촉진할 수 있는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기에 장애가 되는 현 제도의 제약조건과 자활후견기관의 여성자활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요보호여성'의 관점에서 시도된 여성자활사업의 평가와 실천모형 연구는 박경숙(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정치사회적 문제로서의 '빈곤의 여성화'라는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는 한국여성연구소(2001), 장남식 외(2001), 김수현(2001), 이숙진(2001)등이 있다.

2. 연구쟁점과 자료의 성격

앞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첫째 여성자활의 현실적 조건은 어떠한가? 자활성공자 가운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 가구원수, 소득변화 등의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자활에 성공한 여성은 연령과 수급권 형태별로 자활의 경로, 자활 후 고용상태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현행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은 여성 자활성공자의 빈곤탈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 자활후견기관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연령, 소득, 노동경험, 가구구성 등의 상황은 남성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갖는가? 자활을 위한 여러 업종 형태 가운데 여성특화 자활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노동조건은 어떠하며 인성 및 기능계발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성특화 자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협동성, 친밀도, 생활의욕 고취정도, 자립전망 등의 면에서 특화된 성격을 나타내는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자활의 조건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자료는 부산광역시가 2001년 9월 현재 수급권자로부터 탈피된 부산 거주 빈곤층의 자활성공 특성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모두 263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한 자료는 부산자활정보센터가 2001년 12월에 부산 소재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90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각각의 자료에서 여성의 숫자는 110사례, 252사례이다.

3. 여성 자활의 현실적 조건

여성자활을 둘러싼 강남식 외(2001), 이숙진 외(2001) 등의 논의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과와 연계된 현재의 자활사업은 노동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의 생계 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이행이라는 소극적 성격이 보다 크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받는 임금은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김수현(2001)의 연구에서 실증된 것처럼 여성자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혼

런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나 개설과목 문제 외에도,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등 제도적, 내용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가구 단위의 자활지원체계는 여성 본인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사회적 노력을 막고 있다. 한편 성, 연령차별적 노동기회의 구조나 복지기능에 있어서 가족의 배타적인 책임을 강제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여성자활의 현실적 조건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자활은 자활프로그램에 의한 탈빈곤과정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여타 자구적 노력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전망을 진일보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 현재 자활에 성공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의 조건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 현실화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자활성공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58.3%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성의 자활 성공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²⁾ 그런데 여기에서 자활성공의 제한적 의미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자료의 수집 시점인 2001년 9월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사실 정책의 영향과 성과로서 자활 성공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측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한 여성 자활성공자의 조건 분석과 모니터링은 현재의 빈곤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동권을 확보하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가를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활성공자의 기본적인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자활성공자의 평균 연령은 38세로서 남성의 41.8세보다 젊은 편이다. 또 평균 가구원수는 여성이 2.9명으로 남성의 3.1명보다 약간 적다. 그리고 이들이 자활 성공 이전에 비해 증가한 소득액은 여성이 53만 9천원으로 남성의 65만 4천원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활 이전의 소득액은 여성 45만 6천원, 남성 45만 7천원으로 거의 같은 데 반해, 자활성공 후의 소득액은 각각 99만 5천원, 111만 1천원으로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반적 추세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자활이 비교적 쉽지 않으며 자활 성공 이후에도 소득액 증가폭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MF 사태 이후 고실업상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남성 생계 부양이데올로기에 기인한 성차별적 고용의 관행, 점점 더 주변적 고용상태로 놓여지고 있는 여성직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조순경, 2000).

2) 2001년 현재 전국의 조건부 수급권자 49,800여명 중 여성의 비율은 57.1%이고, 부산자활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64.6%이다.

여성 자활성공자의 연령집단별 분포는 20대 이하 33.6%, 30대 12.7%, 40대 36.4%, 50대 이상 17.3%이다. 그리고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자활한 경우만 놓고 연령분포를 계산해 보면 20대 이하 41.0%, 30대 16.7%, 40대 26.9%, 50대 이상 15.4%이다. 이러한 여성 자활성공자의 연령집단별 분포는 지금까지 밝혀진 여성의 M자형 취업유형³⁾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 있는 30대 여성에게 있어서 빈곤의 덫은 부분적으로 성별분업을 기초로 조직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 때문에 발생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앤 쇼우스톡 사쑤, 1989) 그리고 50대 이상 빈곤여성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구조가 더욱 더 폐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연령과 수급권 형태별로 여성 자활성공자의 자활 경로, 자활 후 고용특성을 분석해 본다. 먼저 자활성공자의 자활 경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인 취업이 70%로 가장 많지만 가구원 취업에 의한 자활성공 비율도 25.5%로 적지 않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밖에 본인 창업이나 가구원 창업에 의한 자활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령별로 자활경로를 교차분석한 결과, 본인 취업이나 본인 창업 등 여성 스스로에 의한 자활성공 경로는 20대 이하와 30대 등 젊은 층이 높다(<표1>). 이것은 이숙진 외(2001)가 인천시 빈곤여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상대적으로 자활성공률이 높은 보다 젊은 층 빈곤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자활지원 특화의 방향이 타당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 여성 자활성공자의 연령별 자활 경로

|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계 |
|-------|--------|--------|--------|--------|--------|
| 본인취업 | 32 | 13 | 21 | 11 | 77 |
| | 86.5% | 92.9% | 52.5% | 57.9% | 70.0% |
| 본인창업 | | 1 | 2 | 1 | 4 |
| | | 7.1% | 5.0% | 5.3% | 3.6% |
| 가구원취업 | 4 | | 17 | 7 | 28 |
| | 10.8% | | 42.5% | 36.8% | 25.5% |
| 가구원창업 | 1 | | | | 1 |
| | 2.7% | | | | .9% |
| 전체 | 37 | 14 | 40 | 19 | 11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2=21.0(P<0.05)$

3)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유형은 서구의 경우와 비슷하게 “두단계 취업주기”로 나타나는데 처음 학교를 떠날때는 노동시장에의 참여율이 높으나 그 후로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35세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45세 이상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M자형을 이룬다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편 자활에 성공한 빈곤여성의 수급권 형태는 전체 110 사례 가운데 취업대상자 48.2%, 비취업대상자 12.7%, 기타수급권자 39.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취업 대상자의 경우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라는 비교적 중장기적인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자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 형태별로 자활 경로를 보면, 본인 취업을 통한 자활 비율이 비취업대상자 85.7%, 기타 수급권자 81.4%(본인 창업 9.3% 포함)인 데 비해, 취업대상자의 경우 64.2%로 오히려 비교적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취업 대상자의 자활 경로를 본인 취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정책 설계가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2>).

<표 2> 여성 자활성공자의 수급권 형태별 자활 경로

| | 취업대상 | 비취업대상 | 일반가구 | 계 |
|-------|--------|--------|--------|--------|
| 본인취업 | 34 | 12 | 31 | 77 |
| | 64.2% | 85.7% | 72.1% | 70.0% |
| 본인창업 | | | 4 | 4 |
| | | | 9.3% | 3.6% |
| 가구원취업 | 18 | 2 | 8 | 28 |
| | 34.0% | 14.3% | 18.6% | 25.5% |
| 가구원창업 | 1 | | | 1 |
| | 1.9% | | | .9% |
| 전체 | 53 | 14 | 43 | 110 |
| | 100.0% | 100.0% | 100.0% | 100.0% |

그렇다면 본인의 취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여성에 한정하여 자활 이후 고용상태를 알아본다. 우선 여성의 자활 후 고용상태는 전체적으로 상시고용이 72.7%로 임시 및 일일고용보다 많다. 이것을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하면, 상시고용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93.8%로 압도적으로 높고 40대가 76.2%로 그 다음이며, 30대 46.2%, 50대 이상 36.4%의 순서이다(<표3>). 이처럼 30대 빈곤여성에게서 임시 및 일일고용 형태가 많은 것은 자녀양육 및 가사유지에 대한 부담의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시고용의 기회 자체가 제한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3> 여성 자활성공자의 연령별 자활 후 고용상태

|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이상 | 계 |
|------|--------|--------|--------|--------|--------|
| 상시고용 | 30 | 6 | 16 | 4 | 56 |
| | 93.8% | 46.2% | 76.2% | 36.4% | 72.7% |
| 임시고용 | 2 | 4 | 3 | 5 | 14 |
| | 6.3% | 30.8% | 14.3% | 45.5% | 18.2% |
| 일일고용 | | 3 | 2 | 2 | 7 |
| | | 23.1% | 9.5% | 18.2% | 9.1% |
| 전체 | 32 | 13 | 21 | 11 | 77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chi^2=20.3(P<0.01)$

수급권 형태별로는 비취업대상자 여성의 상시고용 비율이 비교적 낮는데, 이것은 조건유예자까지 포함하는 기타수급권자에 비해 보건복지부 자활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비취업대상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취약함을 시사하는 것이다(<표4>). 이렇게 볼 때 공동체 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를 자활의 경로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취업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여성 자활성공자의 수급권 형태별 자활 후 고용상태

| | 취업대상 | 비취업대상 | 일반가구 | 계 |
|------|--------|--------|--------|--------|
| 상시고용 | 25 | 7 | 24 | 56 |
| | 73.5% | 58.3% | 77.4% | 72.7% |
| 임시고용 | 8 | 1 | 5 | 14 |
| | 23.5% | 8.3% | 16.1% | 18.2% |
| 일일고용 | 1 | 4 | 2 | 7 |
| | 2.9% | 33.3% | 6.5% | 9.1% |
| 전체 | 34 | 12 | 31 | 77 |
| | 100.0% | 100.0% | 100.0% | 100.0% |

$\chi^2=11.1(P<0.05)$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행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의한 자활프로그램은 여성 자활성공자의 빈곤탈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표5>). 무엇보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취업이나 본인 창업에 의해 자활에 성공한 전체 81 사례의 빈곤여성 가운데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자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은 경우는 56.7%인 46 사례에 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활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취업대상자는 대부분 취업알선에 의거하고 있어서, 취업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자활프로그램 가운데 빈곤 여성의 고용능력 제고를 위한 자활직업훈련은 김 수현(2001)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활 성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취업대상자 여성의 경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비교적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 창업을 전제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현재 시점에서 자활 성공에 도움 준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표 5> 취업 및 비취업대상자 자활성공 여성의 자활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

단위 : 사례(%)

| | 취업대상자 | 비취업대상자 | 전체 |
|-------------|-----------|-----------|-----------|
| 취업알선 | 30(88.2) | | 30(65.2) |
| 자활인턴 | 4(11.8) | | 4(8.7) |
| 취로형 자활근로 | | 2(16.6) | 2(4.3) |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 | 5(41.7) | 5(10.9) |
| 기타 | | 5(41.7) | 5(10.9) |
| 계 | 34(100.0) | 12(100.0) | 46(100.0) |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자활에 성공하기 위한 빈곤여성의 현실적 조건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20대와 40대에 비해 30대와 50대 이상의 자활 성공률이나 상시고용 비율이 저조한 결과는 30대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조건의 부재를, 그리고 50대 여성의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연령차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시행이 1년 가량밖에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 의한 정책 프로그램의 수급자 구분이나 자활 성공 노력 등이 빈곤 여성의 자활 성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는 못하고 있다.

4.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이 절에서는 앞서 고찰한 여성자활의 조건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여러 현실적 제약들을 극복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자활 프로그램이 좀더 많은 빈곤여성을 자활 성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활사업 업종 중에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한 여성특화 자활사업을 도출해 내고 그 발전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부산자활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된 부산광역시 14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은 평균 연령이 44.3세로서 남성의 46.8세보다 젊은 편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월 소득도 여성이 42만 7천원으로 남성의 39만 1천원보다 높다. 여성 중에 노동의 경험이 있는 비율 또한 33.3%로 남성의 29.9%보다 좀더 높다.⁴⁾ 이렇게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노동능력과 경험 면에서 남성보다 양호하며 이를 통한 소득활동도 좀더 활발한 셈이다.

한편 조사대상 여성의 평균 가구원수는 3.09명으로 남성의 2.88명보다 약간 많다. 이들 빈곤여성의 가구 형태는 본인,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가 45.6%으로 가장 많고 부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32.9%, 독신가구 9.9%, 기타 11.6%이다. 남성의 경우 부자가구 27.2%, 핵가족 30.9%, 독신가구 19.1%, 기타 22.8%이어서, 여성의 편부모가구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⁵⁾

그렇다면 현재 빈곤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종을 파악함으로써, 여성특화 자활사업을 규정해 본다. 여성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업종은 간병, 봉제 및 전자조립, 가정도우미 등 세 가지이다(<표6>).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성특화 자활업종은 간병서비스로서 전체 자활사업의 45.2%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여성특화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빈곤여성의 노동조건, 인성 및 기능계발 실태, 협동성, 친밀도, 생활의욕 고취정도, 자립전망 등을 비특화 자활사업의 여성에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

4) 조사대상 여성의 수급자 특성은 비취업대상자 67.5%, 취업대상자 13.7%, 차상위 및 일반저소득층 7.2%, 자활특례자 7.2%, 일반수급자 및 기타 4.4%이다. 남성의 경우 각각 59.9%, 21.2%, 2.9%, 8.8%, 7.3%이다. 즉 여성 가운데 차상위 및 일반 저소득층이 좀더 많은 편이지만,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취업대상자의 비율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빈곤여성의 교육급여에 대한 필요성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교육급여가 아주 필요하다는 비율은 여성이 76.8%인데 남성은 63.9%이며 필요없다는 비율은 여성 7.8%인데 비해 남성 11.3%이기 때문이다.

<표 6>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성별 참여업종

| | 남성 | 여성 | 계 |
|-----------|--------------|--------------|---------------|
| 간병 | 4 3.4% | 144 96.6% | 148 100.0% |
| 집수리 | 45 81.8% | 10 18.2% | 55 100.0% |
| 세차 | 30 57.7% | 22 42.3% | 52 100.0% |
| 청소 | 20 54.1% | 17 45.9% | 37 100.0% |
| 농장일 | 3 75.0% | 1 25.0% | 4 100.0% |
| 봉제 및 전자조립 | 5 14.3% | 30 85.7% | 35 100.0% |
| 재활용 | 22 62.9% | 13 37.1% | 35 100.0% |
| 가정도우미 | | 27 100.0% | 27 100.0% |
| 기타 | 9 33.3% | 18 66.7% | 27 100.0% |
| 전체 | 138 35.4% | 252 64.6% | 390 100.0% |

$\chi^2=157.6(P<0.01)$

우선 여성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노동일수,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환경 등을 파악해 본다(<표7>). 여기에서 노동일수는 주당 일한 날짜를, 노동시간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강도는 매우 힘들 2점, 힘들 1점, 힘들지 않음 -1점, 전혀 힘들지 않음 -2점의 평균 점수이며, 작업환경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함 2점, 쾌적하고 안전함 1점, 열악하고 위험함 -1점, 매우 열악하고 위험함 -2점을 평균한 점수이다.

여성특화 자활사업 가운데 대표적 형태인 간병사업은 업종의 특성상 노동일수는 적지만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는 센 편이나 작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자활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조건부과에 의의를 두는 공동부업장형 사업인 봉제 및 전자조립의 경우, 노동일수가 적고 노동강도가 약한 반면에 작업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가정도우미의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발견된다.6)

6) 자활후견기관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성의 경우 노동일수는 월평균 4.8456일, 평균 노동시간은 주

<표 7> 여성특화 자활사업참여 여성의 노동조건

| 참여업종 | | 노동일수 | 노동시간 | 노동강도 | 작업환경 |
|-----------|------|--------|--------|--------|-----------|
| 간병 | 평균 | 4.7281 | 8.5526 | .4602 | 7.080E-02 |
| | N | 114 | 114 | 113 | 113 |
| | 표준편차 | .7559 | 2.3987 | 1.0941 | 1.2300 |
| 봉제 및 전자조립 | 평균 | 4.6897 | 8.0000 | -.2000 | .7000 |
| | N | 29 | 29 | 30 | 30 |
| | 표준편차 | .4708 | .0000 | 1.0954 | .9154 |
| 가정도우미 | 평균 | 5.0000 | 7.9630 | .7778 | 7.407E-02 |
| | N | 27 | 27 | 27 | 27 |
| | 표준편차 | .0000 | .1925 | 6405 | 1.0715 |
| 기타 | 평균 | 4.9630 | 7.8519 | .4250 | .3333 |
| | N | 81 | 81 | 80 | 81 |
| | 표준편차 | .4859 | 1.2660 | 1.1989 | 1.3134 |
| 합계 | 평균 | 4.8287 | 8.1992 | .4040 | .2311 |
| | N | 251 | 251 | 250 | 251 |
| | 표준편차 | .6120 | 1.7956 | 1.1125 | 1.2208 |

노동일수의 F값 = 3.6(p<0.05), 노동시간의 F값 = 2.8(p<0.05), 노동강도의 F값 = 4.2(p<0.01)

다음으로 간병, 봉제 및 전자조립, 가정도우미 등 여성특화 자활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인성 및 기능개발을 위한 상담, 교육 상태가 어떠한지 고찰한다(<표8>). 인성 및 기능개발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상담, 인성교육, 기능교육의 여부로서, 각각을 경험한 경우에는 1점,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계산했다.

대표적 여성특화 자활업종인 간병사업은 상담, 인성교육, 기능교육을 받은 정도가 비교적 높다. 가정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이보다 좀더 높은 점수로 가장 상담,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봉제 및 전자조립 업종에서는 비특화 자활사업 보다는 상담이나 교육의 비율이 낮아, 조건부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자활을 위한 인성 및 기능개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둔다고 할 수 있다.7)

당 7.8529시간, 노동강도 평가는 평균 0.2044점, 작업환경 평가는 평균 0.25점이다.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를 세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좀더 높다.

7) 남성의 인성 및 기능개발 실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상담경험 평균점수는 0.9489점으로 여성보다 약간 더 높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인성교육, 기능교육의 점수가 0.8832점, 0.7121점으로, 특히 기능교육 평균점수가 여성에 비해 낮다. 즉 여성특화 자활사업은 남성 중심의 자활업종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표 8> 여성특화 자활사업 참여여성의 인성 및 기능개발 실태

| 참여업종 | | 상담경험 | 인성교육 | 기능교육 |
|-----------|------|--------|-------|-------|
| 간병 | 평균 | .9554 | .9027 | .8396 |
| | N | 112 | 113 | 106 |
| | 표준편차 | .2074 | .2977 | .3687 |
| 봉제 및 전자조립 | 평균 | .8929 | .8571 | .6296 |
| | N | 28 | 28 | 27 |
| | 표준편차 | .3150 | .3563 | .4921 |
| 가정도우미 | 평균 | 1.0000 | .9630 | .8846 |
| | N | 27 | 27 | 26 |
| | 표준편차 | .0000 | .1925 | .3258 |
| 기타 | 평균 | .9000 | .8571 | .7273 |
| | N | 80 | 77 | 77 |
| | 표준편차 | .3019 | .3522 | .4483 |
| 합계 | 평균 | .9352 | .8898 | .7839 |
| | N | 247 | 245 | 236 |
| | 표준편차 | .2466 | .3138 | .4125 |

기능교육의 F값 = 3.0(p<0.05).

<표9> 여성특화 자활사업 참여 여성의 협동정도, 친밀도, 생활의욕, 자립전망에 대한 평가

| 참여업종 | | 협동정도 | 친밀도 | 생활의욕 | 자립전망 |
|---------|------|--------|--------|--------|-----------|
| 간병 | 평균 | 1.0175 | .8947 | .7545 | .1770 |
| | N | 114 | 114 | 110 | 113 |
| | 표준편차 | 1.0130 | .8557 | .9785 | 1.2833 |
| 봉제및전자조립 | 평균 | .9667 | .4138 | .8889 | 7-143E-02 |
| | N | 30 | 29 | 27 | 28 |
| | 표준편차 | .8899 | 1.8062 | .8916 | 1.3032 |
| 가정도우미 | 평균 | 1.3333 | 1.0833 | .9565 | .2083 |
| | N | 24 | 24 | 23 | 24 |
| | 표준편차 | .4815 | .9286 | 1.1473 | 1.3825 |
| 기타 | 평균 | 1.1852 | .8481 | .6582 | .3250 |
| | N | 81 | 79 | 79 | 80 |
| | 표준편차 | .7265 | 1.0632 | 1.1081 | 1.2904 |
| 합계 | 평균 | 1.0964 | .8415 | .7573 | .2163 |
| | N | 249 | 246 | 239 | 245 |
| | 표준편차 | .8746 | .9706 | 1.0288 | 1.2924 |

마지막으로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구성원 간 협동정도, 친밀도와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결과된 생활의욕, 자립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표9>). 여기에서 각각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을 평균한 값이다. 여성특화 자활사업과 비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여성의 협동심이나 친밀도 특성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생활의욕 면에서는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평균 점수가, 자립전망 면에서는 남성과 함께 일하는 비특화 자활사업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⁸⁾ 즉 빈곤여성에게 특화된 자활사업은 경제적 자립의 전망 면에서 약간 불리하게 평가되지만 자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생활의욕 고취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간병, 봉제 및 전자조립, 가정도우미 등 여성특화 자활사업 별로 협동정도, 친밀도, 생활의욕의 평가점수가 어떠한지 비교해 본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특화 사업인 간병의 경우 구성원간 협동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친밀도는 비교적 높으며 생활의욕은 여성특화 및 비특화 자활사업을 합친 전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봉제 및 전자조립에 참여하는 빈곤 여성은 협동정도, 친밀도 면에서 가장 취약한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생활의욕 점수 면에서 비특화 자활사업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조건부과 차원에서 실제 자활 성공의 전망을 갖지 못하는 여성특화 사업이라 할지라도 빈곤여성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갖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은 이에 참여하는 빈곤여성 간의 협동심, 친밀감 점수는 물론, 생활의욕 고취의 정도도 가장 높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특화 자활업종 가운데 봉제 및 전자조립은 생활의욕 고취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성 및 기능개발이나 협동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둔 자립의 전망을 개척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봉제, 전자조립과 같은 공동부업장형 업종은 빈곤여성의 노동 권리 확보와 공동체적 자활 성공을 위해 특화시켜야 할 여성자활사업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 가정도우미 업종은 노동강도가 센 편이지만, 인성 및 기능개발이나 협동성, 친밀성, 생활의욕 고취 면에서 여성특화 자활사업으로 적합한 장점을 보이고 있다. 단지 가정도우미의 경우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적으로 보호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활의 성공을 꾀하려면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대표적 여성특화 자활사업인

8) 해당 지표에 대한 전체 여성의 평균 점수를 남성과 비교해 보면, 남성의 협동정도, 친밀도, 자립전망 점수는 각각 1.2090, 1.0966, 0.4485점으로 여성보다 높은 반면에 생활의욕 점수만 0.6444점으로 여성에 비해 낮다.

간병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은 약간 길지만, 적절한 인성 및 기능개발을 통해 여성특화 자활공동체로 안정적인 성공 기반을 마련하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된다.⁹⁾

5. 맺음말

이제 사회복지가 여성들을 자녀나,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근로연계형 공적부조의 개혁과 함께 구식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근로연계형 자활사업의 도입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빈곤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해주거나 더욱이 빈곤탈피를 보장해 주고는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Coffield(2001)의 지적대로 후기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변화하는 의미를 상징화 시켜 주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재와 남성적 노동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에게 고용은 가정 '경제'라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생존전략이었다. 우리는 고용과 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다수 빈곤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최우선의 복지임을 경험적으로 인식했을지라도, 기존의 복지제도 하에서는 적절히 쟁점화 시켜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적 과제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빈곤여성의 복지쟁점을 '고용', '자립'으로 향하도록 공론화하고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1년 기간 동안의 자활 성공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 여성의 자활은 시장기능을 통한 취업우선 전략에만 맡겨둘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빈곤여성의 현실적 자활 성공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시켜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30대 여성이 20대의 고용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30대의 자활경로는 스스로의 본인취업을 통해서인 경우가 높더라도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활률을 보이고 임시 및 일용직 취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5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다시 자활성공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상시고용이나 본인취업을 통한 자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출산 및 육아부담과 노령화라

9) 2002년 들어 공익형 자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자원화 가운데 간병사업은 가장 진척이 앞선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등에는 광역단위의 간병인사업단이 조직되어 복지간병인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제도화 요구와 아울러 공동의 기능훈련을 통한 자활 성공의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는 생활주기의 비 연속성은 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진입하더라도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사이를 오고가야 하는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생애를 통틀어 지속적인 고용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성자활의 현실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여성의 자활은 고용, 사회적 욕구, 사회복지 서비스등을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면 당면한 과제는 여성의 노동권과 빈곤탈피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실천되고 있는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을 해명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3섹터형 고용창출을 지향하는 간병인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를 통한 여성자활의 모델로 가장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002)에 의하면, 무료 간병도우미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2001년의 2천3백명에서 2002년에는 5천명으로 그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육병 환자, 치매환자 등 질병별로 세분화된 간병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간병도우미 사업 참여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광역단위 사업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단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전망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간병인 사업단과 같은 빈곤여성의 고용형태로 적합한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의 추가 발굴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섹터가 주도하는 공익형 자활사업의 특성은 시장진입을 지향하기보다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결합된 자활공동체의 형성 논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김종일, 2001) 그러한 흐름에서 빈곤여성의 노동권과 안정적 자활을 확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자활 성공의 장애로 존재하는 가사나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시켜 탁아도우미 서비스를 노동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 빈곤여성들의 또 다른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남식 외, 2001, '성인지적 여성자활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자활촉진을 위한 사회적 과제 모색*, 정기심포지움 자료집.
- 김수현, 2001, "여성가구주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자활촉진을 위한 사회적 과제 모색*, 정기심포지움 자료집.

-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일신산
- 박경숙,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2001.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 조순경, 2000, “경제위기와 고용평등의 조건”, 조순경외,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성자활연구모임, 2001, 저소득층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앤 쇼우덕 사순, 1989, “5장.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복지국가의 모순”,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 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이숙진 외, 2001, ‘여성자활에 대한 시론적 접근’, 여성자활지원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발표문.
- 한국여성개발원, 1990, 여성과 직업
- 한국여성연구소, 2001, 성인지적 여성자활사업 평가와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 Coffield, C.D. 2001, “Manpower Placement and Comprehensive Training : The IMPACT of Indiana’s Work First Model”, Journal of Poverty, pp 5-20 Vol.5.